

오리 푸아그라, 햄버거로!

오리의 간으로 만든 최고급 요리 푸아그라가 햄버거로 변신한다. 프랑스 제2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퀵'은 성탄절을 맞아 세계 3대 진미로 알려진 고급요리 푸아그라를 버거로 만들어 선보였다.

퀵은 오리의 간과 쇠고기, 양상추 등이 들어간 버거를 만들어 쉬프렘 푸아그라 라는 이름으로 5유로(약 7,5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전국 350여개 매장에서 판매했다. 다만 퀵은 푸아그라 버거를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만 판매했다. 푸아그라는 강제로 사료를 먹여 살을 찌운 오리나 거위의 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동물 애호가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는 요리다.

퀵은 이를 의식한 듯 성탄절을 맞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값 비싼 미식을 맛볼 수 있도록 푸아그라 버거를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퀵은 지난 9월에는 이슬람 계율에 맞는 식품으로 만든 이른바 할랄 버거를 내놓아 무슬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시아투데이 • 김수경 기자 • muse@asiatoday.co.kr • 2010.12.1

닭고기 · 오리고기 포장 안하면...

내년 1월 모든 영업장 적용, 달걀은 4월부터 유통기한도 표시
내년 1월부터 닭 · 오리고기와 달걀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1월26일자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해 닭 · 오리고기와 달걀에 대한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닭 · 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마리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했던 포장유통 의무가 내년 1월부터 모든 닭 · 오리 도축업 영업자와 도축된

닭 · 오리고기를 보관 · 운반 · 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재래시장 등에서도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됐던 달걀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달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영업신고를 해야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닭 · 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 기능을 강화해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산 및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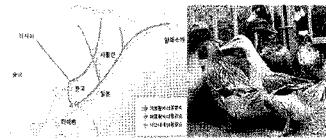
현재는 도축장 자체 검사원의 1일 1인 적정 검사량을 정하지 않고 전년도 검사량에 따라 자체 검사원수만 확보하면 됐지만 개정된 법령에는 검사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1인 추가에 따른 검사량 증가분을 4만마리에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2만마리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해 도축업 및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했고, 원격교육(인터넷 교육)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농민신문 • 양승선 기자 • 2010.12.3

“국내 최대 가금사육지 사수하라” 초긴장

전북 익산 야생조류(청둥오리)서 HPAI검출 비상



▲ 겨울철새 이동경로(그림)와 청둥오리

지난 7일 철새도래지인 전북 익산시 춘포면 소재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닭고기 오리 등을 키우는 양축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병원성AI가 검출된 만경강 주변에 대해 긴급소독과 동시에 야생조류 포획검사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했다.

만경강 주변 긴급소독

포획검사 지점 반경 10km이내 관리지역 설정

AI가 검출된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도로에 소독 시설 및 야생조류 접근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와 가금류 농가 등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곳 만경강 반경 500m~3km 인근에는 11가구에서 닭 9만여수를, 3km~10km 에는 208농가에서 닭 2백59만 7천수와 12가구에서 오리 13만8천수 등 국내 최대의 가금사육지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만큼 닭과 오리 사육 농가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 AI재앙을 겪어 왔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하다. 이곳 익산지역에서 육계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철새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나왔다”며 “농장에 AI가 발생할까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람들과도 전화통화로 만안부를 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새에서 검출된 만큼 철새들의 방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농장 방역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농장주는 “구제역으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AI까지 검출돼 전국 축산인들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 과거 AI 발생이 2년 주기로 터진 만큼 양계농가들은 긴장을 풀면 안 되고 자기농장의 방역은 스스로 철저히 해 농장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금육 수출 등에는 지장이 없고, 발생지역 주변 가금농가에 대하여도 살처분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으며, 이동제한 조치 후 가축방역관의 임상예찰 및 혈청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동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야생조류 뿐만 아니라 가금농가에 대한 상시방역예찰을 강화해 2008년 이후부터 유지하고 있는 AI 청정국 지위를 지켜 나가는 만큼 농장 차단방역을 거듭 당부했다.

AI가 청둥오리에서 감염된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닭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방역은 어떻게 하는지 요점을 정리해 본다.

전북도, AI방역대책본부 설치...차단방역 강화 조치

오리 임상증상 없이 바이러스 오염성 강해 불안 고조

“내 농장 스스로 지켜야” 자주방역 중요성 강조돼

• 어떻게 검출했나

정부는 철새 등 야생조류가 국내로 AI를 유입시키는 점을 감안해 2006년부터 3년간 전국 철새 서식지에서 청

동오리 등 20여종의 분변 5천116점을 채취해 조사했으며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4월 14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배설물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됐고, 10월 15일에는 충남 예산군 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각 지자체는 저병원성이라도 고병원성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오리에서 검출 왜 더 무서운가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다.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서 감염이 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닭과 칠면조에서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국내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오리(집오리, 철새), 거위 메추리 등은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만 임상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분변으로 배출한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변 1그램은 약 100만수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방역은 어떻게 하나

야생조류로 인해 AI가 검출된 후 정부에서는 철새를 포획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30일간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했다.

반경 10km 관리지역에서 가금류의 이동 제한은 오리와 닭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시료채취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오는 29일 풀릴 예정이다.

2010 축산결산

오리 성장세...생산액 2조 돌파할 듯

한우, 구제역에 '음찻'

양돈·낙농, EU와 FTA에 '벌벌'

올해 축산업계는 축종별로 심각한 소비위축과 함께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하락이 예상됐지만 업계의 공동대응이 큰 폭의 가격하락을 막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EU와의 FTA 체결에 이어 미국과의 FTA는 축종을 불문하고 국내 축산업 생산액 감소가 불가피 해 현장중심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오리

오리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농림업 생산액 1조1,54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2조원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배달용치킨과 오리고기에 대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가 지난 8월부터 시행되면서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기대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리 성장세...생산액 2조 돌파할 듯

그러나 오리산업의 성장세에 비해 국내 생산기반과 여건은 취약해 산업에 걸맞는 정책과 대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업계는 축사시설 현대화에 종오리 축사에 대한 별도의 지원마련과 종오리 D/B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 대상에 오리를 포함시키는 등 오리를 육계의 한 부분이 아닌 산업의 한 축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육우갈비 · 오리고기(순살) 내년에도 군납 가능해져

내년에도 육우갈비와 오리고기(순살)를 계속 군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농협 축산유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농·수협 급양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급식방침(안) 회의 결과 돼지갈비를 제외한 육우갈비와 오리고기(순살)을 현행과 같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측은 내년 군급식방침을 정함에 있어 지방과다와 구매품사고를 우려해 육우갈비와 돼지갈비는 삭제하고 오리고기(순살)은 연 9회 급식에서 7회로 줄일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육우갈비는 150g씩 연 2회, 오리고기는 150g씩 연 9회 군장병들에게 급식된다. 다만 연간 3회 공급되던 돼지갈비는 구매품사고 우려로 삭제됐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한우 및 육우고기의 등급 출현율을 반영해 조달등급을 현행 한우 1등급 30%, 2등급 50%, 3등급 20%에서 30%, 65%, 5%로 상향조절했으며, 육우고기 등급비율 역시 2등급 60%, 3등급 40%에서 1등급 5%, 2등급 48%, 3등급 47%로 조정하기로 했다.

농수축산 · 박유신 기자 · yusinya@afnews.co.kr · 2010.12.15

2010년 12월~2010년 2월 축산관측

오리, 12월~내년 2월 가격 3kg기준 7,800~8,100원

농경연은 12월~내년 2월 오리산지가격은 오리 소비증가로 전년보다 상승한 3kg당 7,800~8,100원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월 중오리사육마릿수는 전년 동월대비 16.3% 증가한 78만9,000마리였으며 이에 따른 12월 병아리 생산마릿수는 전년보다 2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2월~내년 2월 도입마릿수는 전년보다 18.4% 증가한 1743만마리로 전망됐으며 오리고기 소비는 대형마트와 홈쇼핑, 인터넷에서의 판매가 모두 증가해 26%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소비증가율이 공급증가율보다 큰 상태를 유지, 12월~내년 2월 오리산지가격은 3kg기준 전년보다 19.9~24.5% 상승한 7,800~8,1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수축산 · 최윤진 기자 · yjchoi@afnews.co.kr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퍼뜨린 농장 장기간 폐쇄

- 농식품부 구제역 대책 -

- 축산업 등록제 대신 '허가제' 도입
 - 소양과 요건 심사해 허가
 - 내년 10월 국회에 개정안 제출
- 축산 관계자 책임 강화
 - 최초 질병 발생농장은 지원비 삭감
 - 의무 소홀 확인 시 장기간 농장 폐쇄
- 방역체계 강화
 - 축산농장 기록관리 의무대상 확대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의무 강화
 - 지자체 초기 방역대응 체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최근 번지고 있는 구제역 등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구제역을 발생시킨 농가에 책임을 지움으로써 축산인 스스로 소독과 방역 의무를 철저히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축살

처분·매몰에 따른 일괄적인 보상 대신에 질병을 발생 시키거나 소독 등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예컨대 축산인이 해외여행 후 입국 신고나 소독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이러한 의무 소홀이 구제역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해당 축산인의 농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에 따른 가축 살처분·매몰 후 새로운 가축을 불하받을 때 이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농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 인근 농가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살처분·매몰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고 생계안정비와 가축 입식 자금 제공에서 제외된다. 구제역이 특정 농가의 부주의한 의무 이행 등으로 발생해 전국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최초 발생 농가를 찾아내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책임 소재를 가려 해당 농가에 지원을 줄일 경우 농가마다 소독 및 방역 의무를 철저히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구제역을 발생시킨 농가는 주변에 죄 없는 농가의 가축마저 죽게 만드는 등 피해를 준만큼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도 큰 변화다. 현행 등록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축산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질병 요인을 통제할 수 없는 자에게는 축산업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상인 우제류,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 면적이 5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익산, 천안, 사천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판정



익산·천안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판정

충남 천안의 종 오리농장과 전북 익산의 종계장에서 접수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오늘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풍세면 소재 종오리 농장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소재 종계장에서 접수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신고는 정밀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오리와 닭을 집단 사육하는 종 오리 농장과 종계장에서 각각 나온 것이어서 인근 지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경남 사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감염된 철새가 발견돼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경상남도는 12월 26일 사천시 용현면에서 폐사된 청둥오리 5마리를 수거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둥오리 발견 장소 3km 이내에 있는 기금류 사육농가 3곳을 모두 긴급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반경 10km이내에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17곳을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가축과 차량, 사람에 대한 이동 통제 조치를 내린 상태다.